#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3
2022/07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이서희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07)

## Contents

**이슈포커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 2

**국제법원**

상설중재재판소(PCA) ····· 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에 대한 선결적 항변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WTO) ····· 11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철폐 협상 21년만에 타결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협정 (비공식 국문 번역문)

**지역별 동향**

아시아 ····· 25
**중국** 중국, 파키스탄·러시아와 해군 협력 강화
**대만** 대만, 이투 아바(타이핑다오)에서 중국 침공 대비 실사격 훈련···필리핀, 영유권 주장하며 항의
**일본** 제13차 중일 고위급 해양회담 온라인 개최
**필리핀-인도네시아** 필리핀-인도네시아, 대륙붕 경계획정 논의

북아메리카 ····· 36
**미국** 美 바이든 대통령,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

유럽 ····· 38
**우크라이나-러시아**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재개 합의

태평양도서국 ····· 42
키리바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탈퇴, 중국의 영향?
프랑스, 중국 영향력 확장 억제를 위한 태평양지역 재무장 구상
PIF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청구를 위한 작업 승인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53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포커스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박 영 길

##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항행의 자유 작전이 대만해협에서 전개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제적 관심사항인 항행의 자유 작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의의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이란 미 국방부가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말한다.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은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1983년 3월 10일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해양정책'(U.S. Ocean Policy)에 포함되면서 정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은 1983년 해양정책에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83년 해양정책은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통령 성명(statement) 형식으로 밝힌 것으로, 분량도 2페이지 정도로 간결하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자신의 해양이익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결정하고 선언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같은 해양의 전통적 이용에 관해 다른 국가들과의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따라 행동할 것임, 둘째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이익균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고 주장할 것, 셋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미국은 해양정책을 발표한 날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였음, Proclamation 5030)

위 해양정책의 결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데, 특히 두 번째 결정에는 다음의 문장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그리고 그 밖의 공해의 자유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들의 일방적 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국제사회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들의 행위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슈포커스

위해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은 크게 외교적 통로,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그리고 작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개는 외교적 항의이고, 마지막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말한다.

미 국무부는 1970년부터 '해양의 한계'(Limits in the Seas)라는 이름으로 직선기선, 해양경계 등 연안국들의 해양 상황을 소개하고 국제해양법의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 중 특히 1992년 발간한 제112호는 제목이 '국가들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 발간한 제150호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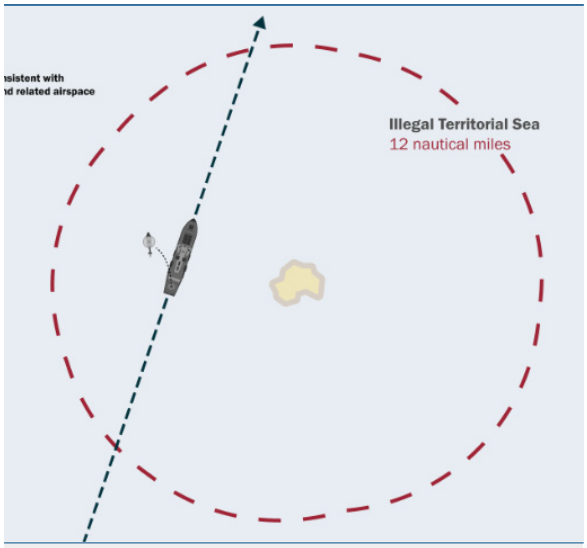
작전을 통한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해군과 공군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해양법과 양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도한 주장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군함과 비행기를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행사한다.

**항행의 자유 작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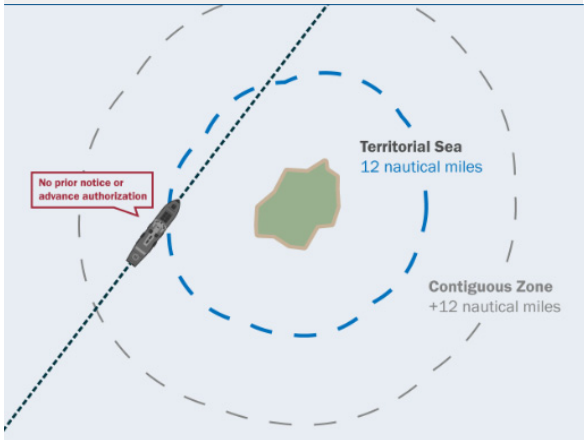
항행의 자유 작전은 1983년 해양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연안국이 해양법과 양립하지 않고 과도하게 해양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묵인하지 않고 있음을 항행이라는 행동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인정되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영해로 포함된 수역에서 영해에서 인정되는 무해통항이 아닌 공해상의 자유통항을 주장하며 항행을 하거나, 간조노출지를 기반으로 12해리 영해를 설정한 수역의 영해를 횡단함으로써 영해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방법, 군함의 영해 통과시 사전허가나 통지를 요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허가나 통지 없이 통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미국의 이러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국의 주장이 해양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안국과의 마찰, 특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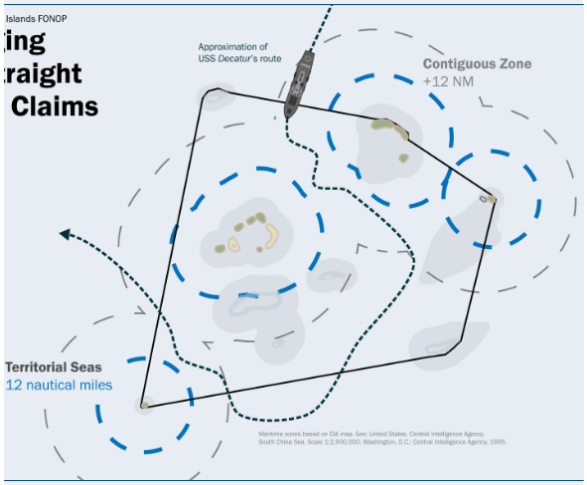
## 이슈포커스




불법형성된 영해횡단




사전통지 · 허거없는 무해통항




불법적 기선 주장

그림 출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

## 이슈포커스

한편, 미국은 이러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강하게 항의하는 국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 국방부는 매년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미 국방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2021년)**

| 대상 국가 | 과도한 해양 주장 내용 | 위치 |
|---|---|---|
| 앤티가 바부다 | 외국 군함의 영해와 군도수역 내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카리브해 |
| 바베이도스 | 외국 군함의 영해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카리브해 |
| 캄보디아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태국만 |
| 중국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남중국해 |
| | 영해 진입의도 없이 방공식별구역 비행하는 외국 비행기에 대한 제한 | 동중국해 |
| |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외국이 수행한 측량과 지도작성을 범죄화하는 측량지도작성법률 | 남중국해 |
| | 외국 군함의 영해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남중국해 |
| | (간조노출지 등) 권원이 없는 지형물 주변의 영해와 상공에 대한 암묵적 주장 | 남중국해 |
| 코스타리카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동태평양 |
| 도미니카 공화국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카리브해 |
| 에콰도르 | EEZ 내 군사 작전 또는 기동에 대한 명시적 동의 요구 | 동태평양 |
| 아이티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카리브해 |
| 인도 | EEZ 또는 대륙붕에서 군사 작전 또는 기동에 대한 사전 동의 요구 | 인도양 |
| | “위험물질 ...등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EEZ를 진입할 때 24시간 사전통지 요건 | 인도양 |
| 인도네시아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통상적 통로를 지나는 군도항로대에 대한 제한 | 마카사르해협, 롬복해협, 순다해협 |
| 이란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 호르무즈해협 통과통항권 제한 | 호르무즈해협 |
| | EEZ와 대륙붕에서 외국의 군사활동과 실행 제한 | 아라비아만, 호르무즈해협, 오만만 |
| 이태리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지중해 |
| 일본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쓰시마해협 |
| 말레이시아 | 영해진입 핵추진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 요구 | 말라카해협 |
| 몰디브 | 외국 군함, 핵추진 선박, 핵 등 위험물질 수송 선박의 영해 진입에 대한 사전 허가 요구 | 인도양 |
| | EEZ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 요구 | 인도양 |

## 이슈포커스

| 대상 국가 | 과도한 해양 주장 내용 | 위치 |
|---|---|---|
| 오만 | 국제해협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무해통항 요구 | 호르무즈해협 |
| 파키스탄 | EEZ 내 군사 작전 또는 기동에 대한 사전 동의 요구 | 북아라비아해 |
| 한국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서해 |
| | 영해 통과 외국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사전통지 요구, 무해통항에 대한 제한 | 서해 |
| 러시아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피오트르대제만 |
| | 피오트르대제만을 "역사적 수역"으로 주장 | 피오트르대제만 |
| 시에라리온 | 영해 통과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동대서양 |
| 스리랑카 | 영해 통과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인도양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영해 통과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허가 요구 | 카리브해 |
| 대만 |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의 군사 또는 정부 선박에 대해 사전통지 요구 | 남중국해 |
| 아랍에미리트 | 영해 또는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화물 설명, 선원 및 승객 목록을 포함하는 서류 제공 요구 | 아라비아만, 오만만 |
| | 20년 이상된 선박의 영해 진입에 대한 과도한 금지 | 아라비아만, 오만만 |
| 베트남 | 영해에 들어오는 외국 군함에 대한 사전통지 | 남중국해 |
|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그어진 직선기선 | 남중국해 |
| 예멘 | 영해 통과 외국 군함과 핵추진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 요구 | 밥 알-만뎁 해협 |

표 출처: 미 국방부, Annual Freedom of Navigation Report 2021

위와 같이 미 국방부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이유는 연안국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항행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이 부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안국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해양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는 것과 달리, 미 국방부는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항행의 자유 작전과 EEZ 내 군사활동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항행을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구별되는 것으로 EEZ 내 군사활동이 있다. 연안국의 EEZ 내 외국의 군사활동은 군사측량, 군사훈련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하는 군사행동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EEZ 내 군사활동이 공해상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로서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순히 항행을 하는 것임에 반해, 연안국 EEZ 내 외국의 군사활동은 EEZ 내에서 특수한 목적과 구체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통상 EEZ 내에서 외국 군함의 단순한 항행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 작전의 관련성이 없다. 다만, EEZ 내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허가를 요하는 연안국에 맞서 EEZ를 항행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의 효용성 논란**

항행의 자유 작전은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과도한 주장 또는 국제법 위반의 행위에 대해 군함의 항행 또는 비행기의 비행을 통해 그것을 묵인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미국의 소극적 의사표시이다. 즉, 단순히 항행만 할 뿐 연안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반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연안국은 강하게 항의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이른바 구단선에 근거해서 남중국해의 대부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대규모 간척을 단행하여 간조노출지 등의 지형들을 인공섬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이 중국의 행위를 중단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제기된다.

**출처** : [1] U.S. Ocean Policy (1983) [2]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nnual Freedom of Navigation (FON) Reports [3] U.S. Department of State, Limits in the Seas No.112(1992) [4]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 Practical Guide” [5] Jonathan G. Panter, “Will Americans Die for Freedom of Navigation?”, Foreign Policy (2021.4.6.)

## 상설중재재판소
## PCA

전문연구원 이 서 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에 대한 선결적 항변

### 사실관계

2018년 11월 24일, 세 척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군함 Berdyansk, Nikopol 및 예인선 Yani Kapu)이 케르치 해협 부근에서 아조프해로 진입하다가 러시아 해안 경비대의 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함정들이 흑해의 오데사 항에서 아조프해 내 베르단스크 항구로 들어오려면, 케르치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은 8시간 동안 케르치 해협에 머물다가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에 러시아 해안 경비대는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을 추적하고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 척의 함정이 손상되었고 승조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11월 25일 오전, 러시아 해안 경비대는 러시아 형사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을 나포하고, 이곳에 탑승하고 있던 24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체포하였다.

그림 2. 케르치 해협




그림 출처: 동아일보, 2018년 11월 28일, "크림반도 4년만에 전운....유럽 일제히 러시아 성토, 美는 비난 자제"

2019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속서에 따라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2018년 11월 24-25일에 발발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시작되었다.

## 상설중재재판소
PCA

### 군함 및 승조원 석방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2019년 4월 15일, 우크라이나는 UNCLOS 제290조 제5항에 따라 군함 및 승조원 석방을 요청하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CLOS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한 일응 관할권이 있으며,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i) 러시아는 세 척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과 우크라이나 군인 24명을 석방할 것, (ii) 양국 모두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 (iii) 양국에 2019년 6월 25일 이내에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 제기

지난 2022년 6월 27일, UNCLOS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러시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1] 이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 선결적 항변 내용 및 판정**

| 쟁점 1 | 군사활동으로서 관할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298조 제1항 (b) |
|---|---|
| 우크라이나 주장 | - 2018년 11월 24일-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행위는 법집행활동에 해당함 |
| 러시아 연방 주장 | - 2018년 11월 24일-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행위는 군사활동에 해당함<br>- UNCLOS 제298조 제1항 (b)에 따라,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은 중재재판소 관할권에서 제외됨 |
| 선결적 항변 판정 | - 2018년 11월 24일 사건은 제298조 제1항 (b)에 따라 중재재판소 관할권에서 제외된 군사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br>- UNCLOS 제298조 제1항(b)상 군사활동이 중단된 사건에서 정확한 시점의 결정은 본안에서 함께 검토할 것 |
| **쟁점 2** | **UNCLOS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 간 존재하는지 여부 (제288조 제1항)** |
| 우크라이나 주장 | - 러시아는 UNCLOS 제32조, 제58조, 제95조 및 제96조에 규정된 면제 의무를 위반함<br>- 양 당사국 간 분쟁은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 |

1) 재판은 크게 관할권에 관한 사항과 본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할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피청구국, 경우에 따라 청구국 등 여타 당사국이 재판관할권이나 수리가능성이나 본안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해야 사항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선결적 항변 제도는 과거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청구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있다.

## 상설중재재판소
PCA

| | |
|---|---|
| 러시아 연방 주장 | - UNCLOS는 면제를 규정하지 않았음 |
| 선결적 항변 판정 | - UNCLOS가 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 러시아의 항변은 선결적인 성격의 항변이 아니기에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함 |
| **쟁점 3** | **중재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 준수 여부 (제290조, 제296조)** |
| 러시아 연방 주장 | - 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 |
| 선결적 항변 판정 | -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러시아 연방의 항변을 기각함 |
| **쟁점 4** |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의무 준수 관련 (제279조)** |
| 우크라이나 주장 | - 러시아 연방이 양국 간 분쟁을 지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음<br>- 러시아 연방이 UNCLOS을 위반함 |
| 러시아 연방 주장 | - 중재재판소는 UNCLOS 제279조 위반 혐의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 |
| 선결적 항변 판정 | - UNCLOS 제279조가 분쟁 악화 혐의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선결적 성격이 없으며, 본안에서 결정되어야 함 |
| **쟁점 5** | **의견교환 의무 관련 (제283조)** |
| 러시아 연방 주장 | - 우크라이나는 UNCLOS 제283조를 위반함 |
| 선결적 항변 판정 | - 우크라이나가 UNCLOS 제283조를 위반했다는 러시아의 항변을 기각함 |
| **쟁점 6** | **추가적 절차 관련** |
| 선결적 항변 판정 | - 당사국 간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br>- 본안에 대한 소송절차가 재개되고, 러시아 연방은 이 판정이 수여된 날부터 최소 5개월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br>- 비용 문제는 본안에서 판결해야 함 |

표 출처: 본인 작성

**출처** : [1] Press Release, 2022년 6월 11일,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 and Servicemen(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2] Press Release, 2022년 6월 27일,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 and Servicemen(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3] 박영길 최지현 유시현 김민 김소담 김소연 김주형 (2019), “2019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동향 연구” [4] 고은수(2022).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사례연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을 중심으로”

## 세계무역기구
## WTO

전문연구원 김지혜

#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철폐 협상 21년만에 타결

지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수산보조금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2]이 21년 만에 타결됐다. WTO 수산보조금협정은 유해 수산보조금을 철폐하여 세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환경 지속가능성을 그 중심에 둔 첫 WTO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추진 배경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 위기에 놓인 전 세계 수산자원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협상으로, 남획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각 정부가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규범협상그룹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WTO 회원국 간 의견차가 커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 특히, 미국, 뉴질랜드, 칠레 등이 포함된 피시 프렌즈 그룹(Fish Friends Group)은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등의 회원국들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과도하고 수산보조금과 과잉어획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산보조금협상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과제에 포함되면서 협상 동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SDGs의 169개 세부목표 중 하나인 SDG 14.6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과잉어획과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보조금의 금지, 그리고 신규 보조금 도입을 자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SDGs 목표 채택을 계기로 201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주요 쟁점별 협상 과정 등을 거친 결과 지난 6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협정이 타결됐다.

2) 수산보조금협정은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164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네바 패키지에 포함됨

## 세계무역기구
## WTO

### 주요 내용

IUU 어업, 남획 어족자원, 그리고 비규제 공해(즉, 지역수산기구의 권한 밖인 공해역)에서 이뤄지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철폐하는 내용이 수산보조금협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협정문에서는 IUU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WTO 수산보조금협정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WTO 수산보조금 협정문 구성 내용**

| 조항 | 내용 |
|---|---|
| 1 | 범위 |
| 2 | 정의 |
| 3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
| 4 | 남획 어족자원에 관한 보조금 |
| 5 | 기타 보조금 |
| 6 | 최빈개도국 회원을 위한 특별규정 |
| 7 |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
| 8 | 통보와 투명성 |
| 9 | 제도적 장치 |
| 10 | 분쟁해결 |
| 11 | 최종조항 |
| 12 | 포괄적 규정의 미채택에 따른 협정 종료 |

표 출처: WTO 수산보조금협정 토대로 본인 작성

### 1. 범위 및 정의(제1~2조)

수산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해면어업과 해상 어업 관련 활동에 특정적인 것으로 이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의미한 보조금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추가적으로 양식과 내수면 어업, 어업협정에 따른 정부 간 지불금 등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수산보조금 수혜자의 국적이나 관련된 선박의 기국과는 관계없이 보조금은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에게 책임이 요구된다.

## 세계무역기구
## WTO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어류”, “어업”, “어업관련 활동”, “선박”, “운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의 정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가져왔다.

### 2. 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제3조)

WTO 회원국들은 IUU 어업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에 개입된 선박 또는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제·행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2조부터 3.6조까지 IUU 어업을 하는 선박 또는 운영자를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3. 남획 어족자원 관련 보조금(제4조)

남획된 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만약 회원국이 어족자원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보조금 또는 기타 조치인 경우 남획된 어족자원에 관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4. 기타 보조금(제5조)

연안국의 관할권 이원 지역이며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협정(RFMO/A)의 권한 밖에 있는 공해에서의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유지를 금지한다. 또한,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선박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어족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어류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5조는 회원국들이 이견을 가장 많이 보였던 조항 중 하나로, 의장이 6월 10일 회람한 협정문 초안에서는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이었지만, 해당 내용은 최종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조항 명칭도 ‘기타 보조금’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회원국들은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SDT) 적용에 관한 구조와 내용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 5.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 회원에 대한 고려

LDC 회원국들은 협정문이 발효된 후 2년 동안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 세계무역기구
## WTO

내에서 제3조와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조에서는 LDC 회원국을 위한 별도의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LDC 회원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가능한 자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LDC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자발적 WTO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구축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6. 통보 의무(제8조)

WTO 회원국들은 이미 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SCM) 제25조에 따라 수산보조금 지급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국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활동의 종류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가급적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의 어족자원 상태, 관련 어족자원을 위한 보전 및 관리 조치의 존재 여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의 선대 규모, 보조금 혜택을 받는 어선명과 식별정보,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의 어종이나 어종군별 어획 데이터 등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정문은 각 회원국들이 IUU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정된 선박 또는 운영자 목록을 매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문 초안에 담겨 있던 불특정 유류보조금에 대한 통보 의무와 강제 노동을 활용한 선박과 기업에 대한 통보 의무에 대한 내용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 7. 기타 사항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협정 이행 검토를 위한 수산보조금위원회 설립(제9조), 분쟁해결에 대한 1994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적용(제10조), 재난 등 협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 상황(제11조)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주요 쟁점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한 협정으로 제12조에서 회원국들이 협상을 지속하여 남은 쟁점사항에 대합 합의가 담긴 포괄적인 협정을 발효 후 4년 내에 타결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협정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합의된 협정은 종료[3]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이번 제12차 회의에서 164개 WTO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국제무역협상 상 높은 의사결정 기준을 통과하여 수산보조금협정이 포함된

3)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의해 협정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 WTO

제네바패키지가 채택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 보조금에 대한 철폐 내용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불특정 유류보조 규제 여부 △강제노동과 관련된 통보의무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못하여 해당 내용은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협정은 미완성 형태의 협정이자 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협정문 또한 협상을 지속하여 포괄적인 협정을 4년 내에 타결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협정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합의된 협정은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축소 압력에 대해 어업 구조 개편 등 국내외적으로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수산보조금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3분의 2가 수락해야하며, 협정이 발효 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A에 추가될 예정이다.

**출처** : [1]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WT/MIN(22)·33/WT/L/1144) [2]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Draft Text(WT/MIN(22)/W/20) [3]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Draft Text Addendum(WT/MIN(22)/W/20/Add.1) [4] IISD, 2022년 6월 23일, “WTO Members Look to the Future in Wake of ”Geneva Package” [5] 외교부, 2022년 6월 17일,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6] KDI 경제정보센터, 2020.1., “WTO 수산보조금 협상 어디까지 왔나”, 『나라경제』 360호 [7] 농축산신문, 2022.06.21., “WTO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국내 영향은”

## 세계무역기구
WTO

전문연구원 김 지 혜(번역), 실장 박 영 길(감수)

#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협정 (비공식 국문 번역문)

## 수산보조금 협정

###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해면어업과 해상 어업 관련 활동에 특정적인 것으로 이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의미한 보조금에 대해 적용한다[4][5][6]

### 제2조 :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a) "어류"란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양생물자원의 모든 종(種)을 의미한다.

(b)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집어, 위치 파악, 포획, 채취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집어, 위치 파악, 포획, 채취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c) "어업관련 활동"이란 어업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활동으로, 이전에 항만에 양륙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환적 또는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장비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d) "선박"이란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하여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모든 선박, 그 밖의 형태의 배 또는 보트를 의미한다.

(e) "운영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을 책임지거나 지휘 또는 통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명료성을 위해,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은 이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5) 명료성을 위해, 어업접근협정에 의거한 정부간 지불금은 이 협정에서 규정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명료성을 위해,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보조금은 관련 선박의 기국 또는 등록국이나 수혜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회원국에 귀속된다.

## 세계무역기구
WTO

### 제3조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7]

3.1 어떠한 회원국도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또는 IUU 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어선이나 운영자[8]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3.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어선이나 운영자는 IUU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9][10]:

(a)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연안 회원국; 또는

(b)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활동에 대해 기국 회원국; 또는

(c) 시의적절한 통보와 관련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 RFMO/A와 관련 국제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의 권한 하에 있는 수역과 어종에 대해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협정(RFMO/A).

3.3 (a) 제2항에 따른 긍정적 판정[11]은 어선 또는 운영자가 IUU 어업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회원국의 최종 판정 그리고/또는 RFMO/A에 의한 최종등록을 의미한다.

(b) 제2항 (a)의 목적상, 연안 회원국의 판정이 관련 사실정보에 근거하고, 연안 회원국이 기국 회원국과 알려진 경우 보조금 지급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제1항조에 따른 금지가 적용된다:

(i) 어선이나 운영자가 IUU 어업에 관여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억류되었거나 혹은 연안 회원국이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사실정보, 적용법률, 규정, 행정절차, 또는 기타 관련 조치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

7)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란 200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8) 제3조의 목적상, "운영자"란 용어는 IUU 어업 위반 당시에 제2조 (e)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명료성을 위해, IUU 어업에 관여한 운영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유지에 대한 금지규정은 어업과 해상 어업관련 활동에 제공된 보조금에 적용된다.

9)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회원국으로 하여금 IUU 어업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IUU 어업에 관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관련 국제 문서들에 따라 등재된 주체들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IUU 어업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것으로 등재된 주체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1) 이 조항은 IUU 어업에 관한 판정을 지연시키거나 그러한 판정의 타당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세계무역기구
## WTO

시의 적절하게 통보;

(ii) 관련 정보가 최종 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정 전에 그러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12]. 연안 회원국은 그러한 정보교환이 수행되는 방식과 기간을 명시할 수 있음; 그리고,

(iii) 최종판정과 해당되는 경우 기간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제재사항에 대한 통보.

연안 회원국은 제9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함)에 긍정적인 판정을 통보한다.

3.4 보조금 지급 회원국은 제1항의 금지사항의 적용기간을 정할 때 선박이나 운영자가 범한 IUU 어업의 성질, 중대성 및 재발 정도를 고려한다. 제1항의 금지사항은 적어도 금지사항을 발동시킨 판정으로 인한 제재[13]가 유효할 때까지 또는 선박이나 운영자가 RFMO/A에 의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때까지 중에서 더 긴 기간까지 적용된다.

3.5 보조금지급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다.

3.6 항만국 회원국이 자국의 항만들 중 한 항만에 있는 선박이 IUU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조금지급 회원국에 통보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회원국은 받은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여 보조금과 관련해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한다.

3.7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보조금을 비롯해 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교부되거나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규정 그리고/또는 행정절차를 마련한다.

3.8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그리고 그 내에서 최빈개도국 (LDC)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의해 교부되거나 유지되는 보조금은 이 협정의 제3조 제1항과 제10조에 근거한 조치에서 면제된다.

12) 예컨대, 이것에는 기국 혹은 보조금 지급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화 혹은 서면정보교환을 위한 기회가 포함될 수 있다.

13) 제재의 종료는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판정을 한 당국의 법 또는 절차에 따른다.

## 세계무역기구
WTO

### 제4조: 남획 어족자원에 관한 보조금

4.1 어떠한 회원국도 남획 어족자원에 관한 어업이나 어업관련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4.2 이 조항의 목적상, 가용 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관할권 하에서 어업이 이루어지는 연안 회원국에 의해 또는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수역과 어종에 대해 RFMO/A에 의해 남획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족자원은 남획 된 것이다.

4.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나 기타 조치들이 어족자원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14]

4.4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EEZ까지 그리고 그 내에서 최빈개도국 회원국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 의해 교부되거나 유지되는 보조금은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과 제10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 제5조: 기타 보조금

5.1 어떠한 회원국도 연안 회원국 또는 연안 비회원국의 관할권 밖 그리고 관련 RFMO/A의 권한 밖의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5.2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선박들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히 자제한다.

5.3 회원국은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어족자원과 관련된 어업이나 어업관련 활동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히 자제한다.

### 제6조: 최빈개도국 회원을 위한 특별규정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이 관련된 사안들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하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할 때 관련된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14) 이 항의 목적상,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은 어업 또는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과 같은 참조점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업관련 가용 데이터와 같은 기타 참조점들을 이용해 어업관련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연안 회원국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해역과 어종에 대해 관련 RFMO/A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을 말한다.

## 세계무역기구
WTO

### 제7조: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최빈개도국 회원국들을 포함한 개발도상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은 이 협정상 규율들을 이행할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 세계무역기구 재원조달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출연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예산자원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 통보와 투명성

8.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통보를 강화 및 제고하고 수산보조금 약속에 관한 이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a)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른 정기적 수산보조금 통보의 일환으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15][16]: 보조금이 제공된 어업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

(b) 가급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른 정기적 수산보조금 통보의 일환으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17][18]:

(i)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에 있어서 어족자원의 상태 (예컨대, 남획,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 또는 과소어획)와 사용된 참조점, 그리고 그러한 어족자원이 다른 회원국과 공유14 되거나 RFMO/A에 의해 관리되는지의 여부;

(ii) 관련 어족자원을 위한 보전 및 관리 조치의 존재 여부;

15) 제8조 제1항의 목적상, 회원국들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라 요구되고 G/SCM/6/Rev.1와 같이 SCM 위원회가 활용하는 질문지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정보에 추가해서 이 정보를 제공한다.

16) 최빈개도국 회원국들과 세계 바다 어획량 중에서 연간 비중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회람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FAO 데이터에 따를 때 0.8%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의 경우,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가 정보에 대한 통보는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7) "공유 자원"이란 용어는 2개 이상의 연안 회원국들의 EEZ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EEZ 이내와 EEZ의 이원지역 및 인접한 수역에 모두 존재하는 어족자원을 말한다.

18) 다종어업의 경우, 회원국은 그 대신에 다른 관련이 있고 이용 가능한 어획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WTO

(iii)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의 선대규모;

(iv) 보조금 혜택을 받는 어선 또는 어선들의 이름과 식별 번호;

(v)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에 있어서 어종이나 어종군별 어획 데이터.[19]

8.2 각 회원국은 IUU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정한 선박 및 운영자 목록을 매년 위원회에 서면 통보한다.

8.3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해 이 협정의 이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거나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이후에 그러한 조치들에 대한 변경사항과 제3조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 취한 조치들을 위원회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8.4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이 협정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를 참고해 자국의 어업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는 회원국 또는 기타 적합한 공식 사이트의 최신 전자링크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8.5 회원국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통보 및 정보에 대해 통보하는 회원국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통보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응한다. 회원국이 이 조항에 따른 통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또는 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8.6 회원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그들이 당사자인 RFMO/A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통보는 최소한 RFMO/A를 설립하는 법률 문서의 본문, 그의 권한 하에 있는 수역과 어종, 관리어족자원의 상태에 관한 정보, 보전 및 관리 조치에 대한 기술, IUU 어업에 관한 판정을 다루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IUU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정한 선박 그리고/또는 운영자에 관한 최신 목록이 포함된다. 이

19) 이 의무는 이 정보를 명시하고 있는 통보 회원국 또는 기타 적절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전자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WTO

통보는 개별적으로 또는 일단의 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20] 이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된다. 위원회 사무국은 이 조항에 따라 통보된 RFMO/A의 목록을 유지한다.

8.7 회원국들은 조치에 대한 통보가 (a) 1994년 GATT,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법적지위, (b)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효과; 또는 (c) 조치 자체의 성질을 예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8.8 이 조항은 기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9조 : 제도적 장치

9.1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수산보조금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연 2회 이상, 그리고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이 협정의 관련 조항이 의도한 바에 따라 모인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혹은 회원국들에 의해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며, 이 협정의 운영 혹은 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기회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수행한다.

9.2 위원회는 제3조와 제8조 그리고 본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적어도 2년마다 검토한다.

9.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의 발전사항에 대해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9.4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3년 마다, 위원회는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정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특히 이 협정의 이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협정의 본문을 수정하는 제안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9.5 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및 관련 RFMO/A를 포함한 어업관리 부문의 기타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20) 이 의무는 이 정보를 명시하고 있는 통보 회원국 또는 기타 적절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전자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WTO

### 제10조 : 분쟁해결

10.1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들은 이 협정에서 달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 적용된다.[21]

10.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의 규정들은[22] 이 협정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 제11조 : 최종조항

11.1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재해 구호를 위한 보조금[23]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a) 특정 재해에 대한 구호로 제한;

(b)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제한;

(c) 기간이 한정;

(d) 재건보조금의 경우, 영향을 받은 어업 그리고/또는 영향을 받은 선단을 재해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제한.

11.2 (a) 이 협정과 관련한 판단, 권고 및 판정을 포함해 이 협정은 영토주장이나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법적 함의를 가지지 아니한다.

(b) 이 협정의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은 어떤 영토주장이나 해양경계 획정에 근거한 판정이 요구되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리지 아니한다.[24]

11.3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발생되는 회원국의 관할권,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25]

21)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b)호 및 (c)호와 DSU 제26조는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이 조항의 목적상, SCM 협정 제4조에서의 "금지 보조금"이란 용어는 이 협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23) 명료성을 위해, 이 규정은 경제 또는 재정 위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4) 이 제한은 또한 분쟁해결양해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에게도 적용된다.

11.4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당사자 또는 협력적 비당사자가 아닌 RFMO/A의 조치나 결정에 구속되거나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11.5 이 협정은 SCM 협정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 포괄적 규정의 미채택에 따른 협정 종료**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 내에 포괄적 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일반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즉시 종료된다.

25) RFMO/A의 규칙과 절차 포함.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 중국, 파키스탄·러시아와 해군 협력 강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NAT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에 맞서 우방국인 파키스탄 및 러시아와 해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최근 파키스탄 해군과 4일간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했으며, 러시아 군함과 공동으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을 통과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태 지역에서 공동 현시(顯示)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 중국·파키스탄, 합동 해상 훈련 '시 가디언즈-2' 실시

중국은 7월 10~13일 상하이 우쑹항에서 파키스탄과 합동 해상 훈련, '시 가디언즈(Sea Guardians)-2'를 실시했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시행된 이번 훈련은 '해상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류원성(劉文勝) 대변인이 전했다.

그림 3. '시 가디언즈-2' 훈련 중인 중국·파키스탄 함정




그림 출처: 신화넷(新華網)

훈련에는 중국 해군 호위함과 보급함을 비롯한 함정 4척과 잠수함 1척, 그리고 경보기, 전투기 등 항공기 4대가 동원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054 A/P 호위함인 타이무르(Taimur)함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 타이무르함은 파키스탄이 올해 6월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중국 최대 조선사인

## 아시아

### 중국

중국선박그룹(CSSC)의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유한회사(滬東中華造船(集團)有限公司)에서 제조했다. 054 A/P 타입 호위함은 중국이 수출한 호위함 중 가장 크고 선진적인 군함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17년 중국에 054 A/P 타입의 호위함 4척을 발주했으며, 타이무르함에 앞서 투그릴(Tughril)함이 올해 1월 파키스탄에 인도되었다. 파키스탄은 또한 중국으로부터 2028년까지 잠수함 8척을 인수하는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그림 4. 중국에서 제조된 파키스탄 호위함, 타이무르



그림 출처: The Express Tribune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외신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우방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6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하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전체를 연결해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26] 무역 및 인프라 확대 중심의 전략이었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전략을 이어가면서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을 통해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3자 협의체인 오커스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의도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동맹국

26)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제2차 내각 출범 시 제시했던 아시아 정책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 아시아

### 중국

과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경제, 기술, 군사 등 측면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가령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7년 말 파키스탄 서부 남단에 중국의 해·공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시 가이언즈-2' 훈련에 앞선 2020년 1월에도 북아라비아해(North Arabian Sea)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국경과 종교 문제 등으로 인도와 오랫동안 마찰을 겪어 왔는데, 인도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쿼드에 인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외에도 둥랑(洞朗, 영어명 Doklam) 지역에서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는 등 이웃 대국인 인도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편이다. 양국은 지난 1962년 티베트 인근 지역에서 국경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1965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이밖에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공동 활동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7월 4일 양국 해군 함정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을 통과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중국군 호위함 1척이 4일 현지 시각 오전 7시 44분에 센카쿠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즉각 항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항해"라고 반박했다. 대만 정부 또한 '댜오위타이'(센카쿠열도의 대만명)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

그림 5. '시 가디언즈-2' 합동 해상훈련 개막식



그림 출처: 중국군사넷(中国军网)

## 아시아

### 중국

**중국·러시아, 공동으로 조어도 접속수역 진입**

러시아 함정이 태풍을 피하려고 일본의 접속수역에 진입했고, 조어도(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이 이를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중국과 러시아 함정의 공동 출현은 나토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위협",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한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표한 지 나흘만이어서 배후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경선이 아닌 중국군 군함이 센카쿠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6년 6월과 2018년 1월 및 6월 이후 네 번째다.

실제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동 움직임도 늘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3월 10~11일에는 러시아 함선 10척이 이례적으로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에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군사 훈련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위이자 러시아 제재에 나선 미국과 이에 동조한 일본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1] The Express Tribune, 2022년 6월 23일, "Pakistan Navy's ship 'Taimur' commissioned in China" [2] rfa, 2022년 7월 11일, "Sino-Pakistan naval exercise raises concern in India" [3] Global Times, 2022년 6월 23일, "China delivers 2nd Type 054A/P frigate to Pakistan" [4]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 2022년 7월 10일, "中巴海軍將舉行"海洋衛士-2"海上聯合演習" [5] 연합뉴스, 2022년 7월 11일, "中·파키스탄 합동 해상훈련…중국산 군함 운용 연습" [6] 조선일보, 2022년 7월 5일, "中·러시아 군함 동시에 센카쿠 인근 해역 진입"

## 아시아

### 대만

전문연구원 정현욱

## 대만, 이투 아바(타이핑다오)에서 중국 침공 대비 실사격 훈련…필리핀, 영유권 주장하며 항의

대만이 이투 아바(Itu Aba, 대만명 타이핑다오·太平島)에서 중국의 침공을 대비한 실탄 사격 훈련을 6월 28~29일 실시했다. 타이핑다오는 남중국해 남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 Spratly Islands)에서 가장 큰 자연 섬으로,[27] 대만 본도에서 약 1,600km 떨어져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더 근접해 있지만,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이다. 대만(당시 국민정부)이 1946년 일본으로부터 수복한 후 1956년에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만 해군이 관할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해순서(海巡署, 해경) 남사지휘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계속해서 이투 아바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훈련에 앞서 대만 해경은 선박과 항공기들이 이투 아바 주변에 접근하지 말도록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6.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이투 아바(타이핑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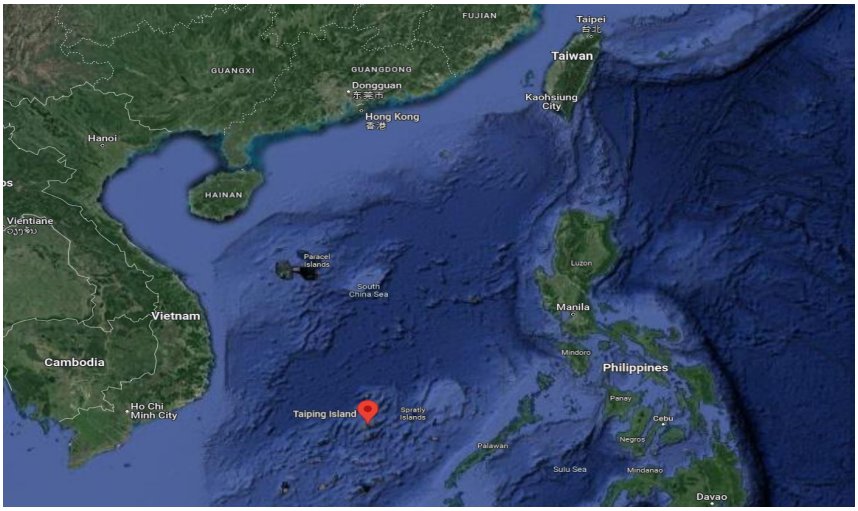



그림 출처: Google

대만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2000년 이투 아바에서 해병대를 철수하고

27)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융슈자오(永暑礁, Fiery Cross Reef) 및 주비자오(渚碧礁, Subi Reef)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필리핀명 Panganiban reef)가 중국의 인공 매립 및 간척 공사로 인해 현재 이투 아바의 면적을 초과한다.

## 아시아

### 대만

대신 해경 순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대만 해경은 실질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고, 2012년 9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실사격 훈련 등 군사 훈련을 시행해 왔다. 대만은 올해 공군사령부의 지휘하에 이투 아바 내 활주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유사시 전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완공한 1,150m의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하는 것이다.

그림 7. 6월 28-29일 대만의 이투 아바 실사격 훈련



그림 출처: 대만 해순서(海巡署)

한편, 대만의 이번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필리핀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29일 필리핀 외교부는 "리가우(Ligaw)섬 부근에서 대만이 실시한 불법적인 실탄 사격 훈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의 군사 훈련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규탄했다. 필리핀은 이투 아바를 리가우섬으로 부르며, 칼라얀 군도(Kalayaan Island Group, 남사군도의 필리핀명)에 속해 있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자국의 일부이므로,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투 아바는 곧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6년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비교적 긴밀했을 당시 마잉주 총통이 군용기를 타고 이투 아바를 방문해 해당 섬의 주권이 대만에 있음을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아시아

### 대만

그림 8. 필리핀 정부의 공식 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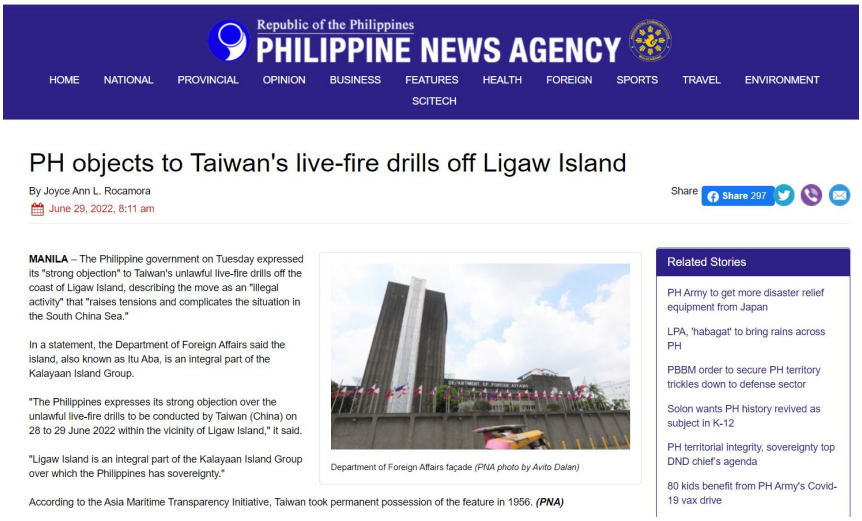



그림 출처: 필리핀 정부 홈페이지

반면, 미국은 이투 아바를 둘러싼 각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신중하고도 모호한 견해를 갖고 있다. 마잉주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 당시 미국은 대만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에 반대하며,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28] 이투 아바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 및 양안의 결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자국의 정책 및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에 유리한 환경을 위해 이투 아바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적극화하고 군사 시설 건설을 확대하자, 이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대만의 활주로 공사에 이례적으로 동의한 것도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출처 :** [1] 주한타이베이대표부, 2016년 4월 11일, “중화민국(대만)의 남중국해 정책 설명서” [2] 필리핀정부 홈페이지, The GOV.PHv(https://www.gov.ph/) [3] The News Lens, 2016년 7월 25일, 太平島為什麼重要？ 那一年，陳水扁總統飛抵太平島主持跑道啟用典禮, [4] CNA(中央通訊社), 2022년 6월 29일, 菲律賓抗議外交部：台灣有權於太平島例行操演

28) 이투 아바를 처음 방문한 대만 총통은 천쉐이볜(陳水扁)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 공군 C130 수송기를 타고 이투 아바를 방문해 몇 달 전 완공된 이투 아바의 활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 아시아

###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 제13차 중일 고위급 해양회담 온라인 개최

6월 23일 후나코시 타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 간 고위급 해양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제13차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해양 및 안보 분야의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이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는 군사 활동,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자원 개발과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해양조사 및 동해 대화퇴 주변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양측은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내용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양국간 「2008년 합의」[29]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중일 해상수색구조(SAR) 협정에 근거한 수색구조협력을 강화하고, 중일 방위당국간 연락 체계의 핫라인을 조기 개설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14회 중일 고위급 해양회담을 연내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중일 고위급 해양회담은 2012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해양 문제를 전반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협의체이다. 고위급 해양회담의 구성은 ① 차관급에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개최하는 공동지도위원회 회의, ② 국장 및 차장급에서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개최하는 전체회의, ③ 전체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워킹그룹 회의, ④ 과장급에서 수시로 협의하는 조정담당자 회의로 구성된다.

**출처 :** [1]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2022년 6월 23일, 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団長間協議 [2]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2012년 5월 10일, 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第1回全体会議の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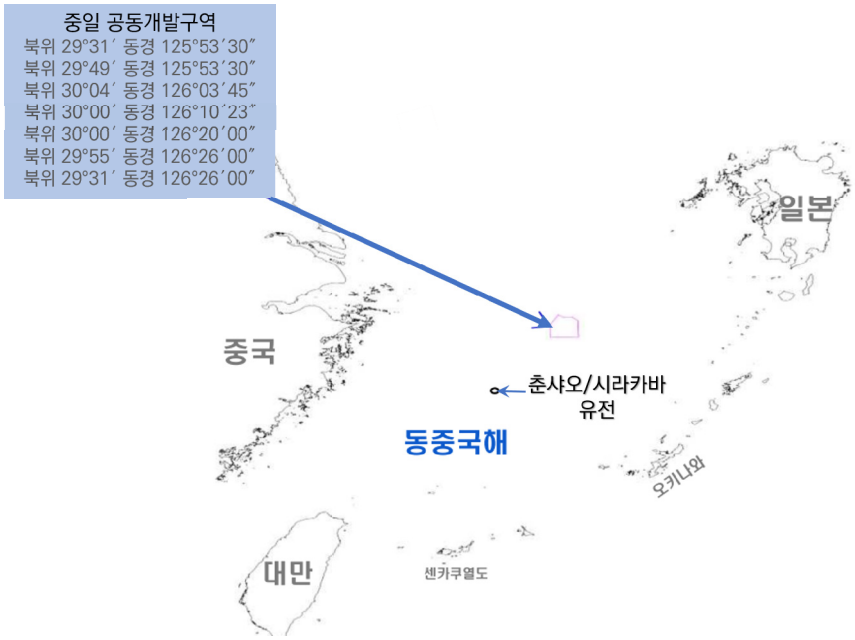
29) 2008년 5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 당시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하고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한 바 있다.

## 아시아

### 일본

그림 출처: 중일 동중국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Japan-China Joint Press Statement,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2008년 6월)

그림 9. 동중국해 중일 공동개발구역 및 춘샤오 유전



## 아시아
## 필리핀-인도네시아

전문연구원 이 서 희

### 필리핀-인도네시아, 대륙붕 경계획정 논의

2022년 7월 6-7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공동상설실무단 제1차 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에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해 논의하였다.[30]

이와 같은 논의는 2014년 5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이 협정을 통해 필리핀의 민다나오 해와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해, 태평양 남쪽 필리핀해의 EEZ를 획정하였다. 이 협정 제1조 1항은 양국의 EEZ 경계를 1984년 세계측지계를 기초로 표시한 좌표점 8개를 연결하는 선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는 양국 어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 및 관련기관 단속권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다만, 발표된 좌표와 첨부지도만으로는 EEZ 경계가 양국 기선의 중간선을 따른 것인지, 섬들과 어업행위 등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계획정의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이 협정은 EEZ 경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EEZ와 대륙붕 경계는 동일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이중경계획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 협정 체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양국이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5월 경계 획정 논의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특별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양국은 이 준비회의에서 대륙붕 경계획정 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인하였고,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과 지침, 각 기준점 확인, 그리고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은 지난 7월 특별회의에서 셀레베스 해에 있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임을 합의하였고, 대륙붕 경계선과 기타 기술적 문제에 관한 영역을 확정짓는 성과를 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대륙붕 경계를 합의하면, 이는

30) UNCLOS 제76조 1항에 따르면, 대륙붕이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영해 밖으로 뻗친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이것이 200마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해저지대의 해상과 하층토를 의미한다.

## 아시아

### 필리핀-인도네시아

해양경계에 관한 국가실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국제해양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EEZ을 획정하고, 대륙붕 획정을 별도의 협상에 맡겨둔 이중경계획정 방식은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 EEZ와 대륙붕 경계선에 대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따르고 있는 이중경계획정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대륙붕의 중간선 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대륙붕 경계 획정 논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 :** [1] Latest News, 2021년 11월 2일, "PH, Indonesia set stage for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oundary" [2]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s continues talks with Indonesia on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3] 김현수(2007), "한일간 동중국해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일본주장의 대응 논리"

## 북아메리카

###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 美 바이든 대통령,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과 강제 노역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불법 조업 및 강제 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정 및 단속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국은 영국·캐나다와 함께 'IUU 어업 행동 동맹(IUU Fishing Action Alliance)'을 결성하여 어업 활동의 감시, 통제, 감독을 포함하여 어선단 및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IUU 어업이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식량 체계 및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UU 어업 과정 중에서는 강제 노동, 인신매매를 비롯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므로 공공·민간 및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IUU 어업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의 21개 연방기관으로 구성된 기관 간 워킹그룹(IWG) 차원에서 IUU 어업에 대응하는 '국가 5개년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대만, 베트남,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대규모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며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대규모 어선단을 동원하여 타국의 영해 및 EEZ를 침범하는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으며, 불법 조업 단속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중국의 IUU 어업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미국은 5월 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함께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구상에 합의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불법 조업을 억제하기 위한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와 해양영역인식 능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미국은 쿼드 국가에 이어 다른 해양 국가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본격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 북아메리카

### 미국

IUU 어업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인도·태평양 주요 어업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1] The White House, 2022년 6월 27일, "[FACT SHEET: President Biden Signs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Associated Labor Abuses" [2] The White House, 2022년 7월 1일, "In Case You Missed It: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rks with Global Partners to Drive Ocean Action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Boost Ocean Economy at UN Ocean Conference"

## 유럽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지난 7월 13일,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간 4자 협상이 타결된데 이어 7월 22일 최종 합의사항이 반영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관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흑해 곡물 수출 재개를 돕기 위해 중재자로 나선 유엔과 튀르키예도 함께했으며, 서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합의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각각 유엔 및 튀르키예와 별도의 동일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세계 주요 곡물과 비료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흑해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계 식량위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0.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서명식 (2022년 7월 22일)



그림 출처: Asia News Network

#### 합의문 체결 배경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에 연간 4,500만 톤의 곡물을 공급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주요 밀, 옥수수 및 해바라기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대부분의 밀과 곡물 등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며 9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된다. 하지만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 유럽

### 우크라이나-러시아

식량 수출의 90%가 이뤄지는 오데사 등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약 2,000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항구에 묶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세계 식량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고 식량가격이 치솟게 되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입국이던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군은 흑해 봉쇄를 "특별군사작전"의 일환이라고 하였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은 이를 정당하지 않은 침략행위라며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곡물을 약탈하고 밭에 불을 지른다고 주장했다.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악화되자 지난 3월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흑해와 아조프해에서의 안전한 '인도적 통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4월부터 유엔과 튀르키예 정부는 흑해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중재자로 적극 나섰으며, 유엔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2개의 유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주도한 태스크포스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주도한 태스크포스에서는 러시아 식량과 비료 수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간 4자 회담에서 흑해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합의가 타결됐으며, 이에 대한 서명식이 7월 22일에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따라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 위치한 오데사항, 체르노모르스크항, 유즈니항 등 흑해 3개 항구에서 주요 곡물과 필수품의 안전한 수출로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해당 합의문은 러시아가 생산한 비료 수출을 위한 안전한 항로도 보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유엔 직원으로 구성된 팀은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선박이 사전에 계획된 항로를 따라 흑해를 운항하기 전에 선박에 곡물이 선적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 (아래 그림 ①)
- 우크라이나 항만을 입출항하면서 지뢰가 매설된 연안해역을 통과하는 데에는 우크라이나측이 제공하는 안전한 항로지도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도선선이 안내한다. (아래 그림 ②)
- 흑해를 가로질러 튀르키예 보스푸르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설립될 공동조정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공동조

## 유럽

### 우크라이나-러시아

정센터는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 ③)

- 보스푸르스 해협을 통과하여 우크라이나를 입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검문이 실시되며, 특히 이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로 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에 군사장비를 싣거나 군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합의문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해에서의 모든 활동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시와 책임 하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 만약 항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뢰제거 작업이 요구되면, 제3국의 소해정이 우크라이나 항만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
- 양측은 선박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해야 하며, 공동조정센터가 정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군용 선박·항공기·드론이 "인도적 해양통로"를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 협정문 이행기간은 120일이지만 이후 자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합의문이 성사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자국의 식량 수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는 스네이크 섬에서 러시아 군이 후퇴한 점, 그리고 아프리카연합이 푸틴 대통령에게 곡물공급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듯이 아프리카에서 식량 위기 문제를 악화시켜 정권 교체를 초래하는 등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지정학적 관계 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군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인근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2개는 요격됐지만, 나머지 2발은 오데사 항만에 떨어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따라 곡물 수출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러시아가 위반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안토니우 쿠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우크라이나 군함을 침몰시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미사일이 보관된 창고를 파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체결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합의가 세계적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불투명해졌다. 당초에 유엔은 합의문을 2주 만에 이행하기 시작하여, 매월 500만 톤의 곡물 수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 우크라이나-러시아

그림 출처: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그림 11.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출처 : [1] AP, 2022년 7월 23일,"'A beacon of hope': Ukraine, Russia sign grain export deal" [2] The Maritime Executive, 2022년 7월 22일, "Three Ukrainian Ports Reopen for Grain Shipment Under UN-Brokered Deal" [3] The Guardian, 022년 7월 22일, "Ukraine and Russia sign UN-backed deal to restart grain export" [4]The Guardian, 2022년 7월 14일, "Turkey announces deal with Ukraine, Russia and UN aimed at resuming grain exports"

##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 영 훈

### 키리바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탈퇴, 중국의 영향?

지난 7월 10일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정상회의 개최 전날 키리바시 대통령 타네티 마마우(Taneti Maamau)는 키리바시가 PIF에서 탈퇴할 것이라 밝혔다.

그림 12. 타네티 마마우(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




그림 출처: RNZ News

#### 키리바시의 PIF 탈퇴 원인, PIF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지역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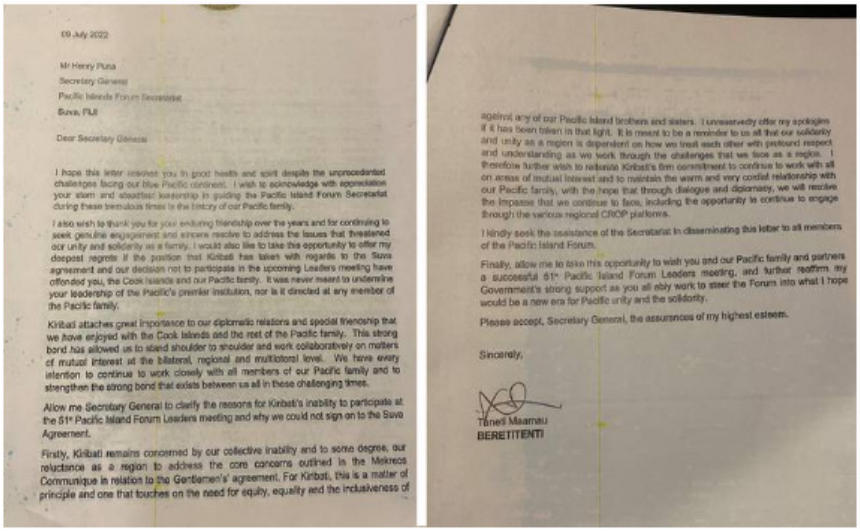
키리바시의 PIF 탈퇴 주된 원인은 표면적으로 PIF내 키리바시의 지위와 대우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리바시 대통령은 PIF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현 PIF 사무총장인 헨리푸나(Henry Puna)의 선출에 관한 불만이다. 키리바시는 PIF 회원국 3개 지역[31] 중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로 헨리푸나 사무총장 선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국이 속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대표가 PIF 사무총장이 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는 1971년

31) 태평양도서국은 지리 · 문화적으로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로 대별되며 멜라네시아에는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바누아투 등이 포함되며, 마이크로네시아에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가, 폴리네시아에는 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 등이 포함된다.

## 태평양도서국

PIF 설립 당시 PIF 사무총장을 각 지역별 포럼의 대표가 순차적으로 맡기로 한 묵시적 합의(Gentlemen's Agreement)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단 1차례 PIF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PIF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2월 쿡제도(폴리네시아 지역) 출신인 헨리푸나가 PIF 사무총장에 선출되면서, 키리바시 등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5개 PIF 회원국들은 더 이상 PIF 회원국으로 남는 것이 국가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PIF에서 탈퇴할 것을 2021년 2월 발표하였다. PIF 탈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되어있어 2022년까지 2월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은 다른 PIF 회원국들과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은 다시 탈퇴 결정을 6월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2022년 6월 키리바시를 제외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셜제도)은 수바협정(Suva Agreement)을 체결하고 PIF에 남기로 결정하였다[32]. 수바협정의 주요내용은 기존 3년의 PIF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현 헨리푸나 사무총장이 2024년까지 임기를 마친 후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대표가 PIF 사무총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사무총장직을 순환하여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13. PIF에 제출된 키리바시 대통령의 탈퇴 공식 서한



09 July 2022

Mr Henry Puna
Secretary General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Suva, FIJI

Dear Secretary General

I hope this letter receives you in good health and spirit despite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facing our blue Pacific continent. I wish to acknowledge with appreciation your stern and steadfast leadership in guiding the Pacific Island Forum Secretariat during these tremulous times in the history of our Pacific family.

I also wish to thank you for your enduring friendship over the years and for continuing to seek genuine engagement and sincere resolve to address the issues that threatened our unity and solidarity as a family.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offer my deepest regrets if the position that Kiribati has taken with regards to the Suva agreement and our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Leaders meeting have offended you, the Cook Islands and our Pacific family. It was never meant to undermine your leadership of the Pacific's premier institution, nor is it directed at any member of the Pacific family.

Kiribati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our diplomatic relations and special friendship that we have enjoyed with the Cook Islands and the rest of the Pacific family. This strong bond has allowed u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and work collaboratively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at the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 We have every intention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all members of our Pacific family and to strengthen the strong bond that exists between us all in these challenging times.

Allow me Secretary General to clarify the reasons for Kiribati's inability to participate at the 51st Pacific Island Forum Leaders meeting and why we could not sign on to the Suva Agreement.

Firstly, Kiribati remains concerned by our collective inability and to some degree, our reluctance as a region to address the core concerns outlined in the Mekreos Communique in relation to the Gentlemen's agreement. For Kiribati, this is a matter of principle and one that touches on the need for equity, equality and the inclusiveness of

against any of our Pacific Island brothers and sisters. I unreservedly offer my apologies if it has been taken in that light. It is meant to be a reminder to us all that our solidarity and unity as a region is dependent on how we treat each other with profound respect and understanding as we work through the challenges that we face as a region. I therefore further wish to reiterate Kiribati's firm commitment to continue to work with all o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to maintain the warm and very cordial relationship with our Pacific family, with the hope that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e will resolve the impasse that we continue to face, including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o engage through the various regional CROP platforms.

I kindly seek the assistance of the Secretariat in disseminating this letter to all members of the Pacific Island Forum.

Finally, allow m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and our Pacific family and partners a successful 51st Pacific Island Forum Leaders meeting, and further reaffirm my Government's strong support as you all ably work to steer the Forum into what I hope would be a new era for Pacific unity and the solidarity.

Please accept, Secretary General,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esteem.

Sincerely,

Taneti Maamau
BERETITENTI

그림 출처: 1 News

32) 수바협정(Suva Agreement)은 PIF의 협정으로 6월 협정 서명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가 참여하였고, 폴리네시아의 사모아와 쿡제도, 멜라네시아의 피지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7월 제51차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 태평양도서국

###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및 PIF에서 키리바시

그러나 문제는 수바협정 체결 과정에서 키리바시가 제외된 것이다. 키리바시는 수바협정 체결 이전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정상회의(Micronesian Presidents' Summit, MPS)에서 지역국들 사이에서 협정 내용에 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키리바시는 수바협정의 공식 채택 일정이 포함된 7월 PIF 정상회의가 키리바시 독립기념일과 중첩되어 PIF 정상회의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월 PIF 정상회의에서 키리바시를 제외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회원국들은 수바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이에 키리바시 대통령 타네티 마마우는 "지역의 결속과 통합은 깊은 존중과 이해와 함께 서로를 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PIF에서 탈퇴할 것을 밝혔다.[33]

그림 14.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키리바시 대통령 타네티 마마우의 5월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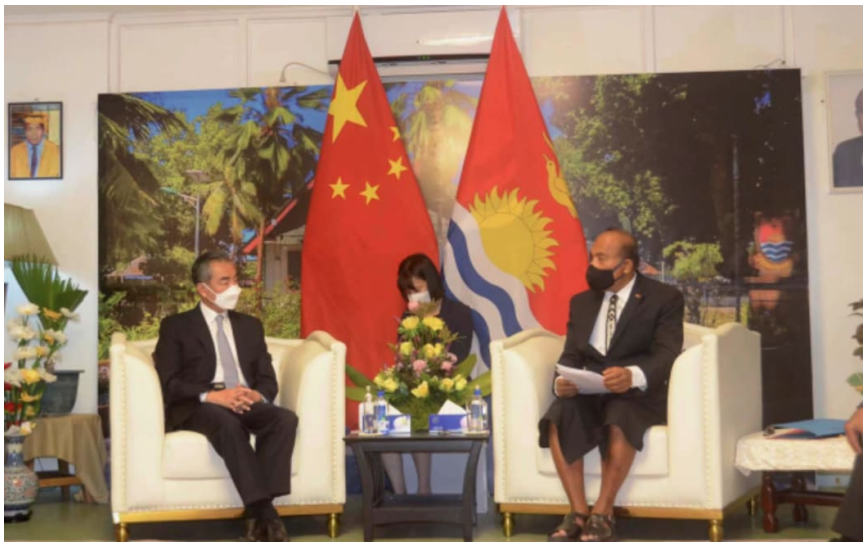


그림 출처: RNZ News

### 키리바시의 PIF 탈퇴와 주변국 대응

키리바시의 PIF 탈퇴에 대해 태평양도서지역의 맹주이며 PIF 회원국인 호주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호주 외교부장관 페니웡(Penny Wong)이 지난 5~6월에 걸쳐 태평양도서국들을 방문하면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과 PIF간 화해 모드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수바협정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뉴질랜드

33) 이번 키리바시의 탈퇴의사는 이미 PIF에서 정하고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났기에 키리바시의 공식 의사 전달과 함께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 태평양도서국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PIF 등과 같은 지역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PIF의 회원국간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키리바시의 PIF 탈퇴가 지역협력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키리바시 전 대통령 아노트 통(Anote Tong)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키리바시의 PIF 탈퇴가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결별을 통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코로나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키리바시 정부가 당장의 원조를 얻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반면, 다른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PIF 회원국들은 키리바시의 PIF 탈퇴에 담담한 모양새다. 특히 피지 대통령이면서 PIF 의장인 보렉 바이니마라마(Voreqe Bainimarama)는 언론을 통해 키리바시의 PIF 탈퇴가 태평양도서국 가족 연대에서 키리바시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태평양도서국들은 지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결속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키리바시와 중국

키리바시의 PIF 탈퇴와 관련하여 중국은 자국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키리바시는 2019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은 후 친중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키리바시 방문시 키리바시 정부는 중국과 1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키리바시의 PIF 탈퇴는 서방과의 고리를 축소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란 추측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측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먼저 키리바시의 PIF 탈퇴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PIF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PIF라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키리바시의 PIF 탈퇴는 이러한 중국의 태평양도서국 정책에 빗겨나가는 행보이다. 그리고 키리바시의 이러한 제스처가 중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키리바시의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안보협정을 고려할 때, 중국과 안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키리바시의 경우 중점협력국으로서의 가치가 솔로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키리바시의 PIF 대통령 서한에도 밝히고 있듯이, 키리바시의 직접적 PIF 탈퇴원인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포럼과 PIF 내의 키리바시에 대한 무시, 불만족에 기인한다. 이는 많은 역사적 사료와 객관적

## 태평양도서국

근거,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키리바시의 PIF 탈퇴를 중국의 영향으로 분석하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PIF를 통해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태평양도서국의 일원인 키리바시가 PIF 탈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얼만큼 활동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1 News(Barbara Dreaver), 2022년 7월 10일, "Exclusive: Pacific islands Forum crisis as Kiribati withdraws" [2] ABC News, 2021년 2월 9일, "Micronesian nations to quit Pacific's peak regional body, leaving it in disarray" [3] ABC News(Stephen Dziedzic), 2022년 7월 11일, "Kiribati announces withdrawal from Pacific Islands Forum on even of leaders' meeting" [4] Pacific Islands Forum, 2022년 7월 14일, "Report: Communique of the 51st Pacific Islands Forum Leaders Meeting" [5] Pacific News Service(Pita Ligaiula), 2022년 7월 13일, "Kiribati will always be a part of the Pacific family, unity will always be our focus: Forum Chair" [6] RNZ News, 2022년 7월 10일, "Kiribati withdraws from Pacific islands Forum" [4] RNZ News, 2022년 7월 12일, "Micronesia bloc responds to Kiribati's departure from Pacific Forum" [7] RNZ News(Eleisha Foon), 2022년 7월 14일, "Kiribati 'cooking something with China'–former Kiribati president" [8] The Diplomat(Martin Kwan), 2022년 7월 19일, "Was China Behind Kiribati's Withdrawal From the Pacific Islands Forum?" [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auru, 2021년 4월 9일, "Nauru formally submits denunciation from Forum" [10] The Guardian(Daniel Hurst), 2022년 6월 1일, "Penny Wong ramps up Pacific lobbying effort as she flies out to Samoa and Tonga" [11] The Guardian(Kate Lyons), 2022년 7월 10일, "Kiribati withdraws from Pacific Islands Forum in blow to regional body" [12] The Guardian(Rimon Rimon), 2022년 7월 12일, "China influenced Kiribati exit from Pacific Islands Forum, MP claims" [13] The Guardian(Tess McClure), 2022년 7월 11일, "Pacific Islands Forum: Arddern says total membership 'critical' as PIF shaken by Kiribati's exit"

##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영훈

### 프랑스, 중국 영향력 확장 억제를 위한 태평양지역 재무장 구상

**솔로몬제도-중국의 안보협정 대응을 위한 프랑스령 태평양섬의 재무장**

프랑스군의 한 고위 지휘관이 프랑스 태평양지역에 군사를 30년전 수준으로 재무장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마티외 레이(Jean_Mathieu Rey) 해군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파탐지기, 어뢰, 미사일 등을 갖춘 더 나은 함정을 태평양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프랑스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 5월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은 이후 이 지역의 안보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프랑스 해군 고위 지휘관이 타히티 인포스(Tahiti-info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인터뷰를 통해 장-마티외 레이 해군 소장은 프랑스가 태평양지역의 미·중간 경쟁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나의 힘이 되길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레이 소장은 현재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군사 시설을 갖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변국과 현재의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레이 소장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태평양에서의 두 거대 세력 논리를 거부하고 프랑스가 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가 중국과의 대화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15. 프랑스군 화물기(A400)



그림 출처: RNZ News

## 태평양도서국

### 태평양지역 균형유지를 위한 프랑스의 다자적 대응 방안 모색

지난 6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레코르누(Sebastien Lecornu)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 감시와 주권 강화를 위해 2척의 새로운 감시정이 올해 배치될 것이라 발표하였고, 더불어 라팔 전투기(Rafale fighter jets)와 프랑스 화물기(A400)를 포함한 훈련이 이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레코르누는 두 지역으로 대별되는 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존중에 기초한 포괄적·다자적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현재까지 태평양지역에서 프랑스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실질적인 자국령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태평양지역 패권 경쟁구도에 이번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자원,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태평양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프랑스는 현재 양강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태평양지역의 패권구도를 다자문제로 전이하여 이 지역에서 자국의 목소리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수단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Asia Pacific Report, 2022년 7월 14일, “Bastille Day message: Paris must ‘re-arm in Pacific’, says commander” [2] RNZ News, 2022년 7월 13일, “French military commander wants Paris to re-arm in the Pacific”

##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영훈

# PIF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의 관한 ICJ 권고적 의견 청구를 위한 작업 승인

### PIF의 ICJ 권고적 의견 청구를 위한 노력

지난 7월 8일 피지 수바에서 2022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PIF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청구하는 것에 합의했다.

기후변화의 법적 결과와 책임에 관해 ICJ의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지난 9월 바누아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누아투의 총리 밥 러프맨 웨이버(Bob Loughman Weibur)는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의 법적 결과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누아투는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한 피해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34] 협약이나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에 적합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국가들간의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 의사를 밝혔다.

그림 16. 제51차 PIF 정상회의




그림 출처: PIF 홈페이지

34) 바누아투는 2015년 사이클론 팸(Pam)으로 인해 국가 GDP의 64%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 사이클론 해롤드(Harold)로 인해 대부분의 가옥, 학교, 의료시설, 농작물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 태평양도서국

PIF는 이 같은 바누아투의 의사를 2022년 외교장관회의에서 PIF 공식의제로 채택 및 승인하고, 7월 14일 PIF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전체가 ICJ 권고적 의견 청구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천명하였다. 올해는 9월에 제77차 유엔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PIF는 이 회의에서 ICJ 권고적 의견 청구를 위한 결의 채택을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ICJ 권고적 의견 청구 관련 유엔총회 결의 채택은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표국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바누아투를 포함한 PIF는 지난 6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2022년 제2차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 UNOC)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현재까지 15개 PIF 회원국과 14개 카리브해 도서국가 정상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기구를 포함한 약 80개의 국가들로부터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IF의 ICJ 권고적 의견 청구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이러한 의문점은 ICJ 권고적 의견의 법적 성격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에서 오는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 ICJ 권고적 의견의 성격과 청구 자격

국제사법기관 특히 ICJ의 권고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권고'에 한한다. 다시 말해, ICJ의 권고적 의견이 국제법의 유권적 해석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제법 원리의 발전과 확인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전제하지 않고 권고적 의견 결과에 따른 행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에, 유엔총회를 통해 권고적 의견이 ICJ로 청구되고 그 판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기후변화에 있어서 어디까지 국가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ICJ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헌장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국제기구에 한한다.[35] 특히 PIF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총회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논의가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곳이다. 현재 많은 도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PIF의 ICJ 권고적 의견 청구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들의 지지의사가 불분명하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소도서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강제

35) 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 65(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 96; ICJ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유엔기구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gans and agencies authorized to request advisory opinions" https://www.icj-cij.org/en/organs-agencies-authorized)

## 태평양도서국

적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는 것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IF는 현재 전 세계 온도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의무에 관한 질의를 결의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국가 책임과 미래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제법상 책임까지 언급하게 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질의에 지지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유엔총회가 오는 9월 13일부터 2주간 개최될 예정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질의를 포함한 결의 초안이 작성되지 않은 것 또한 협상하는 국가에 있어 시간상 상당한 부담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2015년 ITLOS 권고적 의견 관련 2014년 구두변론 및 심리



그림 출처: ITLOS 홈페이지

### ICJ의 대안으로서 ITLOS 권고적 의견

PIF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ICJ 권고적 의견 청구가 실패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권고적 의견 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ICJ와 달리 ITLOS는 권고적 의견 청구에 관한 당사자 자격을 유엔헌장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국제기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ITLOS는 2013년 서아프리카 소지역어업위원회에서 청구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 관할권 있음을 결정하고 2015년 권고적 의견을 판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 성립과 관련하여 ITLOS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PIF가 ITLOS로부터 권고적 의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ITLOS가 정하고

## 태평양도서국

있는 3가지 요건은 1)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국제협정이 ITLOS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있어야 할 것과 2) 권고적 의견의 청구가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과 3) 청구의 내용이 법적 문제에 관한 질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6] 여기서 국제협정(an international agreemen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ITLOS 규정과 절차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근거할 때,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청구가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해당해야 함으로 PIF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리협정내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는 질의는 ITLOS 권고적 의견 청구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PIF는 청구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개발 및 채택하고 질의 또한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등과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ITLOS 권고적 의견의 법적 성격 또한 권고에 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출처 :** [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asic Document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asic Document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5] World's Youth For Climate Justice, "Advisory Opinion 101" [3]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asic Texts and Documents" [4]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2015년 4월 2일,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Advisory Opinion" [5] OpinioJuris(Carlos Antonio Cruz Carillo), 2021년 7월 21일,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nd Oceans: Possibilities and Benefits" [6] Oxfam, 2022년 7월 19일, "Pacific leaders' endorsement for ICJ advisory opinion bid must spur global groundswell" [7] Pacific Islands Forum, 2022년 7월 8일, "2022 Forum Foreign Ministers Meeting; Outcomes" [8] Pacific Islands Forum, 2022년 8월 14일, "Report: Communique of the 51st Pacific Islands Forum Leaders Meeting" [10] RNZ(Lice Movono), 2022년 7월 9일, "Flotilla challenges leaders to support Vanuatu's climate change bid" [11]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Nanettew), 2022년 7월 1일, "At Ocean Conference, Vanuatu Rallies Support for Advisory Opinion on Implications of Climate Crisis" [12] Time(Amy Gunia), 2022년 7월 18일, "Pacific Island Nations Are Bringing Their Climate Justice Fight to the World's Highest Court" [13] Vanuatu, "Vanuatu ICJ Initiative; Pursuing an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4] 정인섭(2021),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36) ITLOS Rules art 138; ITLOS, 2015 SRFC Advisory Opinion, paras. 37, 59-69.

# 3개월 내 행사계획

## IAME(국제해운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 9월 14일(수) ~162일(금) / 부산 벡스코

-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해국제해운연구소, 국제해운경제학회
- **주요 내용**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해운경제학회의 컨퍼런스와 수백 명의 학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 **안내** 프로그램 및 등록을 위해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ame2022.org/

## 국제법학자대회 | 10월 21일(금)~22일(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관** 대한국제법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 **주요 내용** 특별세션 1: 대한민국 국제법의 과거, 현재, 미래 (기조강연)
  특별세션 2: UN해양법협약 체제 40주년 기념 학술행사
  분과위원회
- **안내**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

## 여수해양법아카데미 | 10월 24일(월)~11월 4일(금)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회의실

-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내용** 개도국 해양법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강사들을 초빙하여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교육
- **안내** www.yeosuacademy.com